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ws.kr

뉴스제보: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2021년 2월 22일 (월) [제50호]

정부,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 폐지정책 철회해야

교육 다양화, 미래인재 육성 입각해 국가적으로 검토 필요성 제기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배재고, 세화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제기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사고 취소는 위법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또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으며 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

임부터 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가요소와 재지정 기준점을 갑자기 바꿔 과거 5년 간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폐지수순만 밟겠다는 것이었다며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만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자사고 논란은 학교의 종류와 운영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할 수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자사고 등 학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정권이 초·중·고 교육법 시행령만 고쳐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체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일반고가 더욱 교육력을 높여나가도록 예산과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금현 기자

교육부, 안전한 신학기 개학·개강 위한 준비 상황 점검

교육부는 지난 18일 신학기 개학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제5차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더하여 대학 방역 준비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제5차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학사·수업, 방역, 돌봄, 학교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에 따라 밀집도 원칙 준수하에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자질 없이 학사를 운영하기 위해 학교 교육계획을 점검하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신학기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인력 확보(5만여 명)를 강조

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신학기 방역 준비 상황을 살피기로 했으며, 학생안전, 시설안전 및 학생건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안전 점검도 신학기 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학습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아울러, 코로나19 건강상태 자가진단과 더불어 학생들의 신

학기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등교 전 학생들의 정서 및 신체건강에 대한 자가진단을 지원하고, 그에 맞는 상담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신학기에도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단위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초·중·고 돌봄교실 운영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민준 기자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2021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1년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지원체계이다.

신규 선정 평가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서면·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부산(지능형제조·글로벌관광 등), 인천(항공수리 정비개조·바이오), 대구(지능형 공장), 사전·진주·고성(항공산업),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 평가했고,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 예산·인력 확보 및 조력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먼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교육청·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 지자체·교육청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정비·개조분야 50명·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 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확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전·진주·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2021년 3월~2023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하지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하여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성진 기자

초등신규 교사 연수

자긍심은 커녕 수치심만 준 연수 분노

경기도교육청 산하 혁신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지난 17일 초등 신규교사 2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으로 듣는 교사 이야기’ 온라인 연수가 지탄을 받고 있다. 부부교사를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강사로 등장한 현직 초등교사 2명의 노래 공연(3곡) 중 ‘부부 교사’란 제목의 아래 노랫말이다.

“엘레리 폴레리 너 부부 교사 됐지/ 엘레리 폴레리 또 몰래 뽀뽀하지/ 엘레리 폴레리 손잡고 여행가지/ 엘레리 폴레리 저출산 해결하지/ 3대가 덕을 쌓아야 부부교사/ 교대 때부터 지겹게 들었지/ 남자는 못 먹어도 무조건 부부교사.”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강사는 17일 수강생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하고, 연수원 측도 18일 공식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규교사의 전문성 향상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연수 교사들은 물론 전체 교육자의 교원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수원 측이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아 생긴 인재(人災)”라며 “해당 연수 내용을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가 본다면 교직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개탄하고 “누구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솔선해야 할 교육청이 정작 교사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신규교사는 초·중·고 발령과 함께 학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스스로 교권을 지키는 주체인 만큼, 자긍심과 전문성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문성과 균형적 가치를 가진 강사를 선정하고, 강의 내용도 문제가 없는지 일정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우 기자

INDEX

- ▶ 교육정책
- ▶ 전국종합
- ▶ 인터뷰
- ▶ 전국교육청
- ▶ 충청교육
- ▶ 충청교육
- ▶ 충청교육
- ▶ 전국종합
- ▶ 사회
- ▶ 오피니언
- ▶ 인사

- ▶ 1면
- ▶ 2면
- ▶ 3면
- ▶ 4면
- ▶ 5면
- ▶ 6면
- ▶ 7면
- ▶ 8면
- ▶ 9면
- ▶ 10면
- ▶ 11면
- ▶ 12면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주식회사 엔피에스

■ 정부조달물자판매(학교 및 관공서에 관련된 모든 가구류)

▲ 학생용사물함, 사무용가구, 학생용책걸상, 테이블(식탁), 수강용테이블, 의자, 파티션, 중역용 가구, 소파 등

▲ 협력사 : 서원퍼니처, (주)대우가구, (주)캠퍼스라인, 건영체어시스, (주)한길시스템, 체르마, 가구로 소파

■ 에어컨크리닝

TEL : 041-668-7668

FAX: 041-667-9087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흥2길 126-28 상가동